

CFE REPORT
:: CFE Report ::

2008. 12. 11

경제학자가 진단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이 지 혜

(자유기업원 연구원)

<요 약>

국제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전체로 파급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수준의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각종 금융관련 시장에서 위험 증가에 따른 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대두된 후, 건설관련 기업, 수출 기업들까지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는지, 과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경제는 이를 얼마나 빨리 극복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의 경제학 교수 51인에게 물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그린스펀의 저금리정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생각했다. 통화정책, 즉 정부의 실패가 문제를 만들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고위험 상품 개발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시장 스스로의 불균형을 치유하는 과정일 뿐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공황처럼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하였다. 학점으로 본다면, ‘C’학점을 매겨 정부의 대응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정책 신뢰성과 리더십 회복을 꼽아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음을 지적하였으며, 국민전환용이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닌 시장을 이해하



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외환 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러면서도, 경제학자들은 이 모든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경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오바마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그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개방과 FTA 추진을 꼽아 경제위기에도 개방을 통한 선진화는 중요한 해답임을 시사했다.

I

조사 배경 및 개요

1.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임.
 -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IMF는 2009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함.
 - ▶ 국내금융시장 또한 KOSPI 지수가 1,000p 선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미국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이후에도 1,500 원대를 상회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 공포가 가시화 되고 있는 추세
 - ▶ 내수부진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사정이 악화 되고 있으며, 3분기 실질국민소득은(GNI)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함.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세계경제 침체 따른 교역량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 여건마저 악화됨. 실제로 11월 수출은 292억 6,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감소함. 이번 수출 감소율은 2001년 12월의 -20.4% 이후 최대치임.
-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정부개입 주장이 커지는 추세
 - ▶ 경제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부개입주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음.
 - ▶ 자유주의 시장경제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에서조차 각종 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개입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논쟁 중에 있음.
- 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는 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

- ▶ 최근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 상태를 진단하고자 함.
- ▶ 아울러 정부, 기업, 개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2. 경제학 교수 대상 설문조사 개요

- 경제 전문가 집단인 경제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
에 응한 경제학 교수 51인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 경제학 교수(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국제통상학 포함. 이하 경제학자
로 표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설문조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음.
 - ▶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 교수 51인의 의견을 보고서 내용에 인용하였음.

<표 1> 경제학 교수 대상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설문조사 개요

항 목	내 용
조 사 기 간	2008년 11월 21일 ~ 2008년 12월 10일
조 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0개 대학의 경제학(경영학, 국제통상학 포함) 교 수 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깊이 있는 진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 는 것으로 기대됨 .
조 사 방 법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설문조사
설 문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함. • 설문 문항은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글로벌 금 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 / 정부의 경제위기극복 정책 평가 및 방향제시 / 정부·기업·개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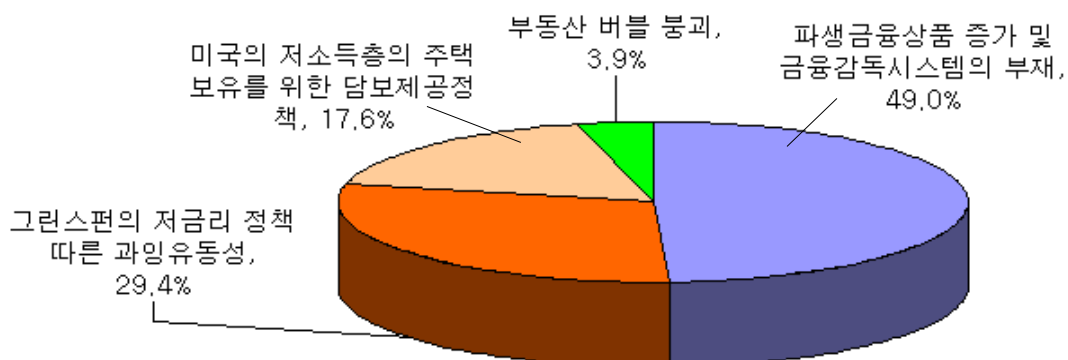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진단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주된 원인은 ‘파생금융상품증가와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25명, 49.0%)와 ‘그린스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과잉유동성’(15명, 29.4%)
 - ▶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무분별한 상품 개발에 대한 이번 실패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제재라고 할 수 있음.
 - ▶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공급을 무제한 확장시켰고 금융회사들은 부실한 기업과 개인에게도 대출을 시행하게 됨. 이후 금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며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됨.

<표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항 목	비 율
파생금융상품 증가 및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	49.0%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유동성	29.4%
미국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를 위한 담보제공정책	17.6%
부동산 버블 붕괴	3.9%



2.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상관관계

● 시장과 정부 모두의 실패 vs 정부의 실패

- ▶ 경제학 교수들은 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장의 실패인지 정부의 실패인지 묻는 질문에 ‘시장과 정부 모두의 실패’(24명, 47.1%), ‘정부의 실패’(24명, 47.1%)라고 응답함.
- ▶ ‘시장의 실패’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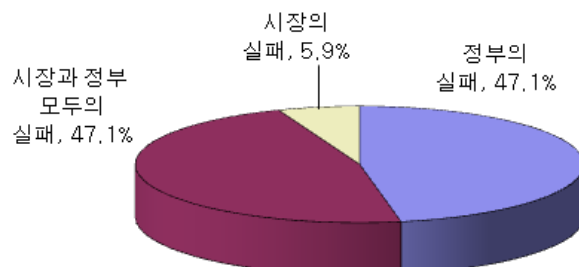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위기는 결국 정부의 실패

- ▶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은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음. 그린스펀의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이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위험한 대출을 시행하게 했으며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높임.
- ▶ 금융기관의 고위험 파생금융상품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
- ▶ 경제학 교수들 역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정부의 실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용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에 의한 경제조정행위의 무모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함.

<표 3> 글로벌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항 목	비 율
시장의 실패	5.9%
정부의 실패	47.1%
시장과 정부 모두의 실패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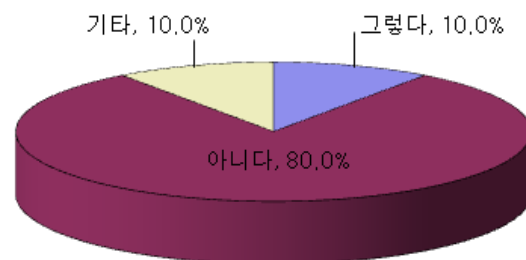
● 현 경제위기 ≠ 신자유주의의 실패

- ▶ 경제학교수 대부분이(40명, 80.0%) 이번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실패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 경제위기를 ‘시장의 실패’라고 평가하는 교수가 거의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단언할 수 없음.
- ▶ 이번 위기는 다시 한 번 금융시장에 있어 정부 개입이 가져오는 폐해를 증명함.

<표 4>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항 목	비 율
그렇다	10.0%
아니다	80.0%
기타	10.0%



- 인천대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상당한 규모와 빠른 속도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해소되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구조조정하고 경제운영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나라만이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이 주가 되는 시장을 구축하고, 공기업을 개혁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홍필기 교수는 “우수한 인력이 자유롭게 뛰도록 규제는 물론, 도덕적 잣대도 과감히 떨쳐내야 한국경제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든 경제든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기존의 경제문제나 정치문제를 넘는 사고방식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을 믿고 시장을 믿고 사람과 시장의 잠재력이 분출되도록, 오히려 시장을 잘 다듬어야 한다. 사람과 시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지적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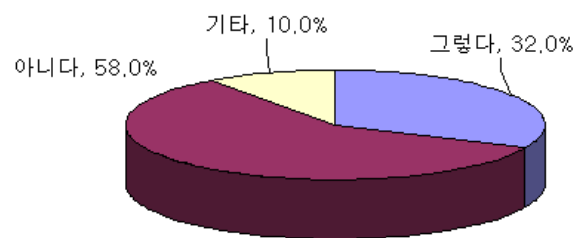
경제위기의 충격과 영향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 이번 경제위기를 세계경제 대공황처럼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지 않아
 - ▶ 이번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29명, 58.0%), 그렇다(16명, 32.0%), 기타(5명, 10.0%)의 순으로 응답함.
 - ▶ 경제위기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시각이 더 많음.

<표 5>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지 여부

항 목	비 율
그렇다	32.0%
아니다	58.0%
기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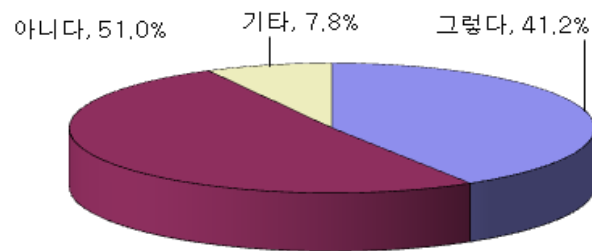


- 세계 경제위기, 심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적어
 - ▶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즉시 G20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국 정상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따라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하기 않고 진정될 것으로 보임.
 - ▶ 또한 금융위기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해 실물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음. 이 또한 세계경제 조기회복에 대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국,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 ▶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한 경제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26명, 51.0%), 그렇다(21명, 41.2%), 기타(4명, 7.8%)의 순으로 응답함.

<표 6> 한국,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지의 여부

항 목	비 율
그렇다	41.2%
아니다	51.0%
기타	7.8%



- 한국, 나아진 경제 펀더멘털과 위기대처능력으로 큰 위기 모면 가능
 - ▶ 외환위기와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다르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대처능력과 기업의 경쟁력,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함.

2.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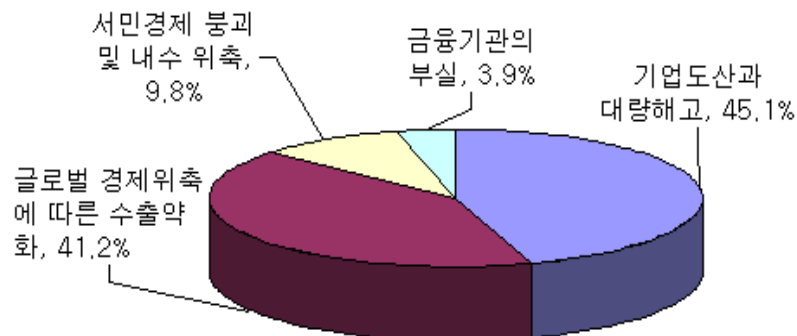
- 가장 큰 위기 전달 경로는 기업
 - ▶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항목으로 ‘기업도산과 대량해고’(23명, 45.1%)와 ‘글로벌 경제위축에 따른 수출 약화’(21명, 41.2%)를 꼽음.
 - ▶ 이어서 서민경제 붕괴 및 내수 위축(5명, 9.8%), 금융기관의 부실(2명, 3.9%)을 선택함.
 - ▶ 경제위기가 오면서 신용경색,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환율 상승 등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기업이 타격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됨.

● 점점 커져가는 기업 연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

- ▶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더불어 환율 및 원자재 상승으로 비용은 높아지는 한편, 내수경기 부진으로 가격인상은 쉽지 않아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큼. 신용위기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의 경우 도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 ▶ 신용경색과 내수침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휴업 및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봄.

<표 7>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항 목	비 율
기업도산과 대량해고	45.1%
글로벌 경제위축에 따른 수출 약화	41.2%
서민경제 붕괴 및 내수 위축	9.8%
금융기관의 부실	3.9%



●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도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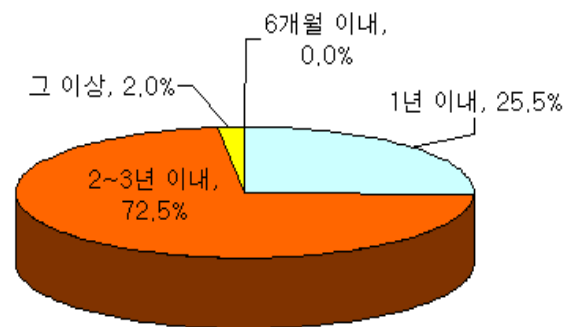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부진은 국민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임. 수출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 경영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날로 악화되며, 자국 산업보호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임.

3. 한국경제의 회복 시점

- 한국경제 회복은 지난 외환위기 시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릴 듯
 - ▶ 한국경제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 ‘2~3년 내’라고 응답한 경제학 교수가 72.5%로 제일 많았음.
 - ▶ 이어서 ‘1년 이내’(13명, 25.5%), ‘그 이상’(1명, 2.0%)으로 응답했으며 ‘6개월 이내’를 선택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 8> 한국경제의 회복시점

항 목	비 율
6개월 이내	0.0%
1년 이내	25.5%
2~3년 이내	72.5%
그 이상	2.0%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노택선 교수는 “지난번 외환위기와 비교해 경제침체의 진폭은 더 작아지겠지만 회복까지의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함.
- 창원대 세무학과 전형준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를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각종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 지금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경계해야 한다. 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위기의 장기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장기적인 투자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IV

정부의 대응노력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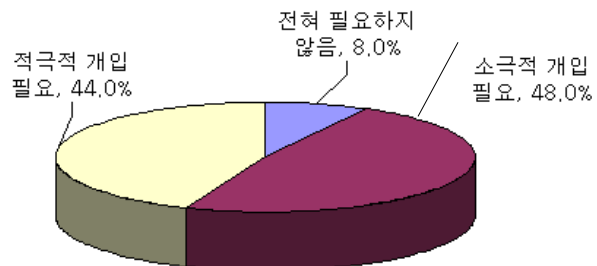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개입

● 경제위기 극복위해 소극적 정부 개입이 필요

-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개입이 얼마만큼 필요하지 않았을 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도의 소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24명, 48.0%) 제일 많았으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22명, 44.0%) 또한 많은 공감을 얻었음.
- ▶ ‘정부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8%나 되었음.
- ▶ 결국 위기를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그러나 위기 시 단기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진화하는 데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 장기적으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표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개입의 정도

항 목	비 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8.0%
소극적 개입 필요	48.0%
적극적 개입 필요	44.0%



● 정부개입이 이뤄지되, 소극적 · 제한적 · 시장친화적으로 해야

- ▶ 현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개입은 필요함.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함.
- ▶ 적극적 개입에 찬성한 경제학 교수들도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인한 뱅크런(펀드런)을 막기 위한 조치나 급작스런 유동성 감소를 상쇄하는 정도로 정부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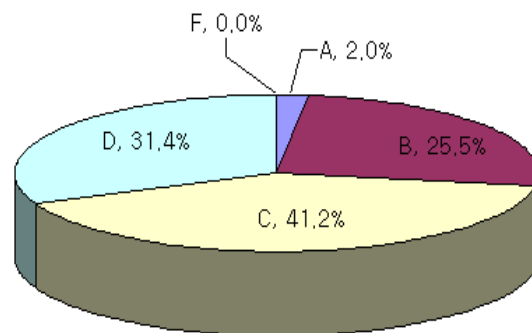
- ▶ 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정부 지출과 정부개입이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 효과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크게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김우택 명예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시장 고유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함.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광 교수는 “지나친 총수요 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함.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박주현 교수는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정부 지출 또한 경제성장잠재력 제고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코 시장경제원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한편 고려대 경제학과 이기석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일 간 해저터널 공사를 착수하여 한·중·일 및 북한을 더 긴밀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컴퓨터 인재를 육성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기계화, 로봇화 등에 대한 선도적 국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실시를 강조함.

2.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평가

- 경제학자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 'C'학점으로 평가
 - ▶ 경제학자들에게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학점 형식으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C 학점'(21명, 41.2%)을 많이 선택함.
 - ▶ 이어서 'D 학점'(15명, 31.4%), 'B 학점'(13명, 25.5%), 'A 학점'(1명, 2.0%) 선택함. 'F 학점'라는 낙제점을 준 경제학자는 없었음.
 - ▶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당국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10> 경제학자들의 경제위기 극복정책 평가(학점방식)

항 목	비 율
A 학점	2.0%
B 학점	25.5%
C 학점	41.2%
D 학점	31.4%
F 학점	0.0%



- 위기 땀질용 정책보다는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
 - ▶ 지난 10월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문제가 터질 때마가 그에 대한 임시처방 식 대응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 또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도 있음.
 - ▶ 펀드 불입금 소득공제 및 배당비과세 정책이나 겨울철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정책 등은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따른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인기영합적인 성격도 보임.
 - ▶ 너무 급한 국면전환용 대책,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대책보다는 경제위기를 직시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표 1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관련 대책

일 시	내 용
10. 6	달러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공급
10.19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은행 외화차입 3년간 지급보장 - 펀드 불입금 소득공제 및 배당비과세도 도입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택지·미분양 매입 7조원 투입 -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유도
10.30	한·미 양국 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11. 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p>(1) 외환·금융시장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스왑 확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유동성(liquidity) 확보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은행채 발행여건 개선 등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노력 강화 <p>(2) 실물경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기대응기능 강화 -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의 재정기능 강화 -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의 금융기관 부실 전이 차단 - 토지·환경·노동 등의 핵심규제를 혁파 <p>(3)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가계대출 금리 안정,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추진 -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11.13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에 160억 달러 공급
11.17	한중일, 통화스왑규모 확대 합의
11.20	겨울철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1.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정책

- ▶ 10개의 경제위기 대책을 제시 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2가지 정책을 선택하게 함.
- ▶ 10개의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 모두를 포함해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2>임.

<표 1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항 목	비 율
정책 신뢰성 및 리더십 회복	35.8%
규제완화 통한 투자확대 유도	21.1%
외환시장 안정	11.6%
금리인하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9.5%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7.4%
감세정책	5.3%
재정지출 확대	4.2%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확대	3.2%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	1.1%
FTA 추진 통한 개방 확대	1.1%

● 장기적인 경제정책에 더 관심,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불끄기 관심

- ▶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촉발되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용경색과 환율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화 정책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선택되었음.
- ▶ 반면, 대구대 경제학과 전용덕 교수는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통화량 통제, 이자율 간접 규제 철폐, 자유무역 지속적 추진 등이 한국경제를 위한 대책”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지적함.

<표 1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할 정책 TOP 5

단 기	정책 신뢰성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	• 정책 신뢰성 및 리더십 회복
		• 외환 시장 안정
		• 금리인하 및 유동성 확대
장 기	경제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필요	• 규제완화 통한 투자확대 유도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 금리인하 및 유동성 확대 필요성

- ▶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에 따라 금리의 추가 인하가 필요할 수 있음.
- ▶ 금리 인하를 통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의 경직성을 풀기 위한 보완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행해져야 함.
- ▶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부실한 은행과 기업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무리한 정부정책은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으로 옥석을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라고 충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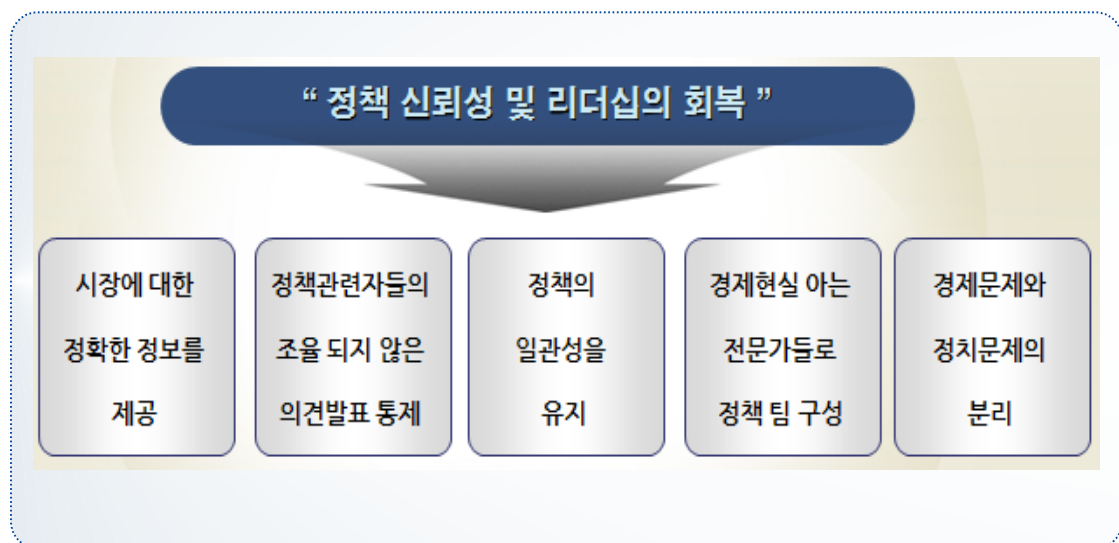
● 외환 시장 안정 필요성

- ▶ 환율정책의 경우 환율의 변동 폭을 줄이고,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필요

가 있음.

- ▶ IMF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요구됨.
-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기업의 수익여부가 ‘환 헤지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함.
- ▶ 한편 인하대 경영학과 전용수 교수는 “경제는 마음이 중요하며, 신뢰 회복과 사회적 불안 및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내지 해소에 총력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동성 위기대응 지원은 과감하게 그리고 충분히 조기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위기관리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표 14> 경제학 교수들이 제시하는 정책 신뢰성 및 리더십 회복 방안



● 정책 신뢰성 및 리더십 회복

-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특히 경험하고 있는 환율의 불안정은 정책담당자들의 일관성 없는 발언과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운대 경영학과 송영출 교수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도록 정부는 (1)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2) 정책관련자들의 조율되지 않은 의견 발표를 통제하며 (3)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함.

- ▶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T 신뢰가 약한 편”이라면서 “인적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선우석호 교수는 “국제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 한편,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강만수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 ▶ 이번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꼽히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김종호 교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청산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함.

● 규제완화 통한 투자확대 유도

- ▶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규제가 많은 편이므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당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경제회복 시점을 고려한 장기적인 성장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규제완화 정책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만우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기업이 투자 및 고용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 또한 극동대학교 경영학과 유한수 교수도 “현재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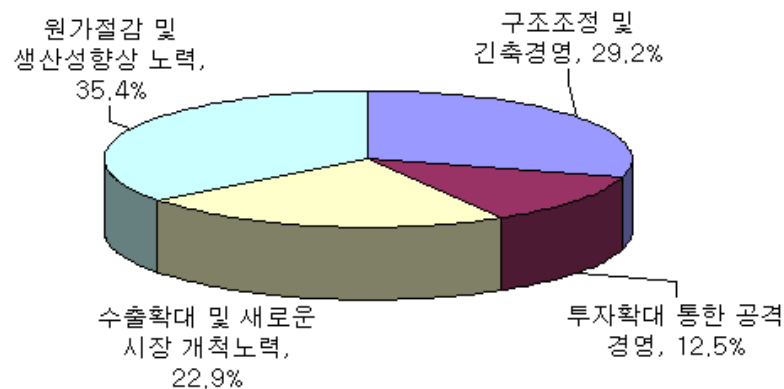
2.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 기업, ‘생존’이 관건

- ▶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경제학 교수들은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17명, 35.4%)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 이어서 ‘구조조정 및 긴축경영’(14명, 29.2%), ‘수출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11명, 22.9%), ‘투자 확대 통한 공격 경영’(6명, 12.5%)을 선택함.

<표 15> 기업에게 적합한 경제위기 대책

항 목	비 율
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 노력	35.4%
구조조정 및 긴축경영	29.2%
수출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	22.9%
투자 확대 통한 공격 경영	12.5%



- 충남대학교 권택성 교수는 “기업이 구조조정과 부실 청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함.

- 한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는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러나 리스크를 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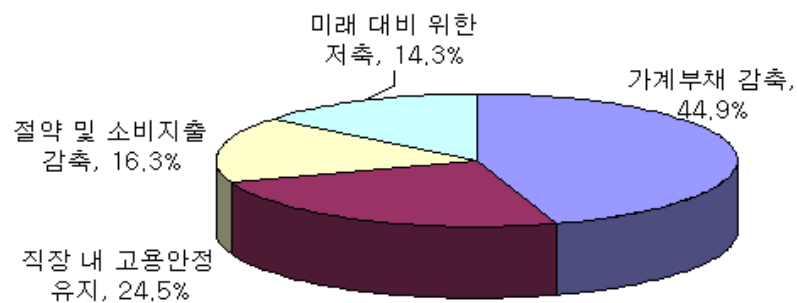
3. 개인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빚 청산

- ▶ 개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으로 ‘가계부채 감축’(22명, 44.9%)을 선택함.
- ▶ 또한 ‘직장 내 고용안정 유지’(12명, 24.5%), ‘절약 및 소비지출 감축’(8명, 16.3%), ‘미래 대비 위한 저축’(7명, 14.3%)을 선택함.

<표 16> 개인에게 적합한 경제위기 대책

항 목	비 율
가계부채 감축	44.9%
직장 내 고용안정 유지	24.5%
절약 및 소비지출 감축	16.3%
미래 대비 위한 저축	14.3%



● 가계부채, 경제위기 고통을 크게 만들 수 있어

- ▶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가계부채는 증가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개인들의 고통은 더 클 수 있음.
- ▶ 더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는데, 경기침체로 부동산의 유동성 및 현금화가 위축될 것임.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계들의 경우 이자부담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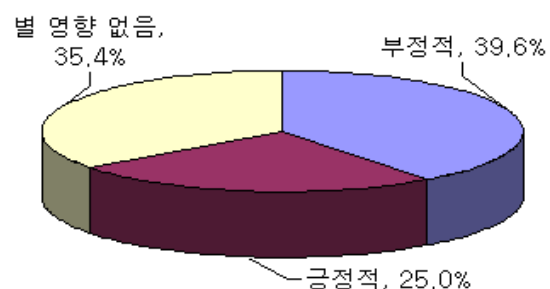
-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침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
 - ▶ 경기 악화되면 가계 채무 불이행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함.

4. 미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 경제

-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가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
 - ▶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경제학 교수들은 ‘부정적’(19명, 39.6%)일 것이라고 의견과 ‘별 영향 없을 것’(17명, 35.4%)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 보호무역 기조에 이어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등 시장개입 정책이 많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비슷한 비율로 제시되고 있음.
 - ▶ 오바마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강한만큼 ‘긍정적’(12명, 25.0%)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음.

<표 17> 오바마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

항 목	비 율
긍정적	25.0%
부정적	39.6%
별 영향 없음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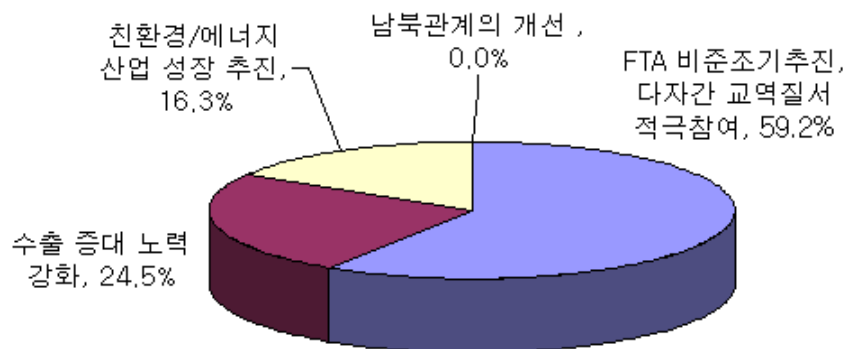


- 오바마노믹스 대비 위해 FTA 비준이 가장 필요
 - ▶ 오바마노믹스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FTA 조기 비준 추진 및 다자간 교역질서 적극 참여’(29명, 59.2%)와 ‘수출 증대 노력 강화’(12명, 24.5%)를 선택함. 개방과 수출로 요약할 수 있음.

- ▶ 이어서 ‘친환경·에너지 산업 성장 추진’(8명, 16.3%)을 선택했음.

<표 18> 오바마노믹스 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항 목	비 율
FTA 조기 비준 추진, 다자간 교역질서 적극 참여	59.2%
수출 증대 노력 강화	24.5%
친환경·에너지 산업 성장 추진	16.3%
남북관계의 개선	0.0%



● 개방과 수출을 통해 미래 대비

- ▶ 한미 FTA추진 비준, 다자간 교역질서에 적극 참여 등 전방위적 글로벌화를 추진할 필요성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시사함.
- ▶ 오바마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수출 대상국을 유럽,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비도 필요

- ▶ 오바마의 ‘공정무역을 가장한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책 필요함. 환경규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노동 조건을 규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음. 수출 상품 제작 시, 위의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성장 추진을 택한 비중이 높은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VI

결론

1. 경제위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

- 위기관리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 또한, 책임공방이나 경질론으로 이번 위기를 정치적인 문제에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중요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2. 위기에도 원칙은 중요

-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함. 그러나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시장기능을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수를 통제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옳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움.

3.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자세, 경제위기해소에 도움

- 지금의 위기를 불안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필요함.
- 단기적으로 위기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회복시점과 더불어 재편성될 국제 경제질서에 한국이 선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함.
- 정부는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경제리더십을 구축해 개인과 기업이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나라가 한 뜻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

[별첨 1] 설문 조사

경제학자 50인이 말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설문조사 (답은 O표시)

설문지 보내실 곳	E-mail : ljh@cfe.org	FAX : 02-3774-5050
설문지 내용 문의	담당 : 자유기업원 이지혜	TEL : 02-3774-5009

1. 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미국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를 위한 담보제공 정책 ② 파생금융상품 증가 및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 ③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유동성 ④ 부동산 버블 붕괴	
2. 현 글로벌 경제위기, 시장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입니까?	① 시장의 실패 ② 정부의 실패 ③ 시장, 정부 모두의 실패	
3. 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Yes ② No ③ 기타()	
4. 현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Yes ② No ③ 기타()	
5. 앞으로 한국경제에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① Yes ② No ③ 기타()	
6. 한국의 경우 경제 회복 시점을 언제라고 예측하십니까?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2~3년 이내 ④ 그 이상	
7.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글로벌 경제위축에 따른 수출 약화 ② 서민경제 붕괴 및 내수 위축 ③ 기업도산과 대량해고 ④ 금융기관의 부실	
8.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개입 필요 ③ 적극적인 개입 필요	

9.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점 방식)	① A	
	② B	
	③ C	
	④ D	
	⑤ F	
10.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정책 신뢰성 및 리더십 회복	
	② 재정지출 확대	
	③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확대	
	④ 감세정책	
	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⑥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	
	⑦ 외환시장 안정	
	⑧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확대	
	⑨ FTA 추진통한 개방 확대	
	⑩ 규제완화 통한 투자확대 유도	
11. 기업의 경제위기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구조조정 및 긴축 경영	
	② 투자확대 통한 공격 경영	
	③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	
	④ 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 노력	
12. 개인의 경제위기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가계부채 감축	
	② 업무능력개발 통해 직장 내 입지강화 노력	
	③ 절약 및 소비지출 감축	
	④ 저축 및 적극적 투자로 소득 증대 노력	
13. 오바마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별 영향 없음()	
14. 오바마노믹스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① FTA 비준 조기 추진, 다자간 교역질서 적극 참여	
	② 수출 증대 노력 강화	
	③ 친환경·에너지 산업 성장 추진	
	④ 남북관계의 개선	
15.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는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나, 마지막 조언 부분은 Report에 실명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 교수 명단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인식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강신일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권택성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동헌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유한수	극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봉호	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기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관	군산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이영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용환	금오공과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장익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전용덕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호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용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화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의천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형준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노택선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조명현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준희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성수	경동대 경영학과 교수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한진수	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홍재범	부경대 경영학과 교수
송영출	광운대 경제학과 교수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황진수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순)	